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강화해야”

김관영 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탄핵 정국 인한 소비 위축 우려 해소 위해 민생안정 대책 논의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7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10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성과,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대응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전 발골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처럼 시설 투자에만 기금이 지원된다면, 향후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협 차원에서 함께 건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비상계입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와



17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탄핵정국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계입에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시도협을 통해 제출받아, 좋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총회에서는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 제18대 회장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선출됐다.

지난 17대 임원단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회장으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태홍 충청남도지사를 부회장으로, 김두겸 울산시장을 감사로 구성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17일 대전에서 제8회 대한민국의장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도의회의장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건의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도 수사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 의장은 17일 대전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최초로 2만 명을 넘기며,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사범과 10대 마약사범, 여성 마약사범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류를 섞은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 등 마약류 사범은 우리 삶 속 구석 구석에 침투해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마

약류 단속 공무원들은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도 경찰에 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가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가 조속히 관련 법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尹 파면! 국힘 해체!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실현” |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진보당 소속 당원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현재의 신속한 탄핵결정을 요구하며,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 전권회 위원장을 비롯한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과 강성희 전 국회의원 등 당원 7명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권희 진보당 도당위원장은 “저널리스트 역할을 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드린다”며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저는 또 한 번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 힘에서) 명백한 내란 위헌 행위자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면서 헌법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이 과연 맞나? 일제시대에 불행했던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와 민주공화국을 팔아먹은 지금의 매국노 집단이 뭐가 다르나”며, “진보당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민주공화국의 적이자 국민의 적인 국민의힘 해체 운동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촛불집회에서 10대와 20대를 비롯해서 60대와 70대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참여하여 세대 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어 너무 감격스러웠다”며, “평창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시민혁명에 실패



전권희 도당위원장(사진 가운데), 강성희 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했다면 우리는 10대와 20대의 젊은 세대에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텐데 다행히 탄핵소추에 성공하여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말로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 마음으로 진보당은 도민과 함께 합쳐서 내란 완전 종식, 윤석열 파면, 내란 공범 처벌, 국민의 힘 해체, 청년과 국민이 잘사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헌신 매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실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진보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삶을 예는 강추위 속에서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전북 자치 도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도민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이어 “윤석열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불법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 고도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반성은커녕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좌고우

면하지 말고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이번 내란 사건의 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제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을 바꾸고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뿌리는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 힘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힘이 없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이번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통해 87년 헌정 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진보당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 제도를 수립하고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여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진보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을 변론 심리기일로 확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심리에 들어갔다.

/이만호 기자

‘5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밀착형 이슈 발굴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 지적 및 대안 제시를 위해 힘을 쏟았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농산물 수입 실태 △부실한 수급관리 정책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락 △농민과 정부 모두에 손해를 끼치는 가투살 정책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 △농업 생산비 폭등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한강리버버스 사업 추진과정의 위법성 △해양수산 경력 전문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농어업정책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정책감사로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 정부 예산삭감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026년 새만금 신항이 배후부지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대학도시 조성, 지방소멸 문제해결 발전 모델’

민주 한병도 의원 등, 오늘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의사 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현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의회 정례회 폐회... 올 한해 의사일정 마무리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가 17일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안전처리와 함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최광호 예산결산위원장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49억5,46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급없이 원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003억3,15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498억9,75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3,400만16,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됐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의회는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와 차기년도 의회 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